

# “9·19 군사합의 파기, 군사적 긴장 고조”

### 전북자치도의회, 이명연 의원 발의 ‘한반도 군사적 긴장 완화 위한 남북대화 촉구 결의안’ 채택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가 19일 열린 정례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이명연 의원이 발의한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결정 규탄 및 한반도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남북대화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명연 의원

결의안의 주문은 총 3개로, 첫째, 9·19 군사합의를 파기한 윤석열 정권에 대한 규탄의지를 천명하는 것과,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남북군사회담 재개 및 9·19 군사합의 체제의 즉각적인 복원, 끝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이후 단절된 남북소통채널 복구

및 남북대화 재개를 촉구하는 것이다. 정부는 작년 11월 9·19 군사합의의 일부 효력 정지 결정을 내린 것에 이어 이번 달 4일에는

했다. 이후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를 위한 안전권으로 역할 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결국 이번 9·19 군사합의 파기결정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안전권을 제거한 셈이다.

결의안을 발의한 이명연 의원은 “9·19 군사합의 파기 이후 서울 하늘로는 오물풍선이 날아다니고 북을 향해서는 대북전단지 살포와 대북확성기 방송이 재개되는 상황”이라면서 “현 상황은 군사적 긴장이 옴트고 있는 수준이지만 한반도 상황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언제든지 군사적 도발이

가능하다. 이후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를 위한 안전권으로 역할 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결국 이번 9·19 군사합의 파기결정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안전권을 제거한 셈이다. 결의안을 발의한 이명연 의원은 “9·19 군사합의 파기 이후 서울 하늘로는 오물풍선이 날아다니고 북을 향해서는 대북전단지 살포와 대북확성기 방송이 재개되는 상황”이라면서 “현 상황은 군사적 긴장이 옴트고 있는 수준이지만 한반도 상황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언제든지 군사적 도발이

/이만호 기자

## 전북자치도의회 8명 제15회 우수의정대상

### 강태창·김대중 의원 등 지방자치 발전 기여 공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강태창(군산), 김대중(익산), 박정규(임실), 서난이(전주), 오은미(순창), 윤수봉(완주), 윤정훈(무주), 최형열(전주5) 의원이 19일 대한민국시도회의장협의회가 선정한 ‘제15회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



19일 ‘대한민국시도회의장협의회 제15회 우수의정대상’ 시상식이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열렸다. (사진 왼쪽부터, 김대중 의원, 박정규 의원, 윤정훈 의원, 오은미 의원, 서난이 의원, 국주영은 의장, 강태창 의원, 최형열 의원, 윤수봉 의원)

우수의정대상은 대한민국시도회의장협의회가 광역 시·도의회 가운데 지역주민의 복리증진 및 삶의 질 향상과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의원을 선정해 수여하는 상으로 15회째를 맞이했으며, 국주영은 전북특별자치도회의장(전주12)이 상패를 전수했다.

이날 수상 의원들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로 새롭게 출범한 해에 명예로운 상을 받게 돼 영광이며, 앞으로도 모두가 잘살고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더 열심히 뛰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국주영은 의장은 “제12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전반기 2년 동안 의원님들의 헌신적이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감사드리며, 앞으로의 2년 역시, 도민을 위하고 도민과 함께 뛰는 멋진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길 부탁드립니다”고 축하인사를 전했다. /이만호 기자



## 남원시의회 상임위원회 현장의정활동 나서

남원시의회 상임위원회는 지난 18일부터 이틀간 현지답사를 가졌다.

자치행정위원회(김정현 위원장)는 남원지역자활센터에서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자활 사업을 통해 안정적인 일자리로 탈수급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했으며, 승화원에서는 시설현대화와 발맞춰 방문객 편의 증진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유족과 추모객 방문 시 실수 있는 공간 확보 및 승화원 이용 시 서류 간소화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해결 방안을 제안했다.

경제산업위원회(김영태 위원장)는 이번엔 농산물가공교육센터에서 관계자에게 체계적인 농산물 가공 창업교육을 통한 농업인의 안정적인 창업 지원과 지역농산물 활용 가공제품 개발 및 상품화를 지원하는 사업 취지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며, 미꾸리 음식양식장에서는 남원의 대표 특화 음식인 추어탕의 원료가 되는 미꾸리의 대량 생산을 통해 향후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과 소득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꾸준한 관리·감독을 강조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 “감사위원회, 지방의회 신하로 이관해야”

### 김성수 도의원, 공정·독립성 확보 위한 법 개정 촉구 건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창군 1)은 19일 열린 410회 정례회에서 현행 감사위원회기구로 돼있는 감사위원회의 공정성·독립성 확보를 위한 법 개정을 촉구했다. 김성수 의원은 “감사기구의 장과 소속 직원의 인사권이 자치단체장에게 있기 때문에 감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 뿐만 아니라, 집행기관 소속 직원의 순환보직으로 인해 감사의 전문성 확보 또한 어



김성수 의원

려운 문제점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감사위원회를 행정사무감사·조사권을 갖고 있는 지방의회 신하로 이관함으로써 독립성과 공정성이 보장되는 감사체제를 구축할 것과 감사위원회를 특별자

치시·도의회 소속하에 두며, 감사 위원장 및 감사 위원에 대한 임명 또는 위촉의 권한을 특별자치시·도 의장이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정부에 촉구 건의한 것이다. 한편,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지방 감사기구를 지방의회에 귀속시키거나 감사기구의 장을 주민 직선으로 선출하는 사례가 있으며, 이러한 제도는 감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감사 업무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만호 기자

## 특별자치도 재정·이민분야 권한 이양 해법 찾는다

### 국회사 전북-강원 공동세미나 현안 해결 위한 특례발굴 모색 전북-강원 지역 국회의원 주최

전북특별자치도는 19일부터 20일까지 전북-강원 특별자치도 간의 재정·이민 분야 현안 과제를 주제로 국회 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공동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첫날인 19일에는 전북연구원 주관으로 최병관 전북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박정규 전북특별자치도 기획경제특례와 관련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19일 전북-강원 특별자치도 간의 ‘재정·이민 분야 현안 과제’를 주제로 한 공동세미나가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열린 가운데, 최병관 전북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이남호 전북연구원장, 더불어민주당 이성운·박희승 국회의원 등 관계자들이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이번 세미나는 20일까지 열린다.

이번 세미나는 전북-강원 지역 국회의원 주최로 전북지역 현병도·박윤덕·안호영·이원택·이성운·박희승 의원과 강원지역의 한기호·이철규·박정하·유상범 의원이 참석, 재정·이민 분야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였다. 첫날 세미나에서는 이정희 서울시립대 교수를 좌장으로 전북연구원 장세길 책임연구원, 이지은 한국지방세연구원 부연구원, 민기 전북연구원 석좌교수 등의 발제와 홍근석 연구원, 임재영 연구위원, 방상운·배상진

연구위원 등 여러 관계자들의 열띤 토론이 진행됐다. 특히, 지방소멸, 저출생·고령화, 기후변화, 실업위기 등 전북-강원이 공동으로 직면한 복합적인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자주재원 확보 및 세계와 관련한 지역주도형 특례 발굴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이 집중 제시됐다. 최병관 전북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는 “온전한 자치권을 위해서는 재정 자립을 위한 재정, 조세 등의 특례와

인구 소멸위기 극복을 위해 외국인 고용 등 이민 특례 확충이 필요하다”며, “이번 세미나를 시작으로 양 자치도가 ‘함께 성장, 함께 발전’을 위해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한편, 20일에는 강원연구원 주관으로 ‘외국인 고용 등 이민분야’를 주제로 세미나가 계속될 예정으로, 이러한 연구 성과물을 연계해 향후 재정 및 이민 분야 등의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만호 기자

## 전북자치도의회 정례회 5분 발언

### “전북 교육, 예산 증액 아닌 질적 개선 필요”

#### 김명지 도의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명지 의원(전주11)은 19일 제410회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 전북 교육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촉구했다. 특히, 인구 감소로 인한 학생인구 감소는 단순한 숫자의 문제를 넘어, 도내 학교 존폐와 도내 일부 지역 그리고 교육계만의 문제를 넘어 우리 전북도 소멸 위기의 서막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김명지 의원

김명지 의원은 “인구 감소와 학생인구 감소에 따른 전북 교육의 어려움은 직시하고, 단순한 예산 증액이 아닌 교육의 질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교육 예산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학생 수 감소와 학교 수 감소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현실을 무시할 수 없다”면서 “예산 증액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임을 인정하고, 이제는 교육 정책의 실질적인 개선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 도교육청의 예산은 지난 2022년 7월 기준 3조8,626억 원이었던 예산이 올해 7월 4조 5,022억 원으로 6,395억 원이 증가했지만, 도내에서는 10개 학교와 79학급 그리고, 9,841명의 학생이 줄어든 상황이다. 물론, 인구의 자연감소가 도내 교육 현장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이겠지만, 단순히 예산 투입만이

답이 아니라 하는 것 그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김명지 의원은 “교육은 숫자의 게임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과정. 교육 정책의 성공은 예산도 중요하지만, 교육 정책과 추진의 성과로서 교육 현장의 긍정적인 변화로 측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러한 접근만이 교육을 교육답게 만들고, 우리 전북 지역의 교육 수준을 진정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길”이라면서 “이 길이 지역 소멸의 위기를 벗어나게 해주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김 의원은 △전북 교육 문제를 심층적으로 다룰 전문가 위원회의 설치 △전북민의 특성을 반영한 혁신적인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추진 △도내 14개 시·군 지역 교육 네트워크의 강화 등을 통한 지역사회의 긴밀한 연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교육 정책의 성공은 정책의 수량적 측면이 아닌, 어떻게 그 정책이 학교 현장에서 실현되고 교육 공동체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를 중심으로 측정돼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이만호 기자

## “김제 용지 현업 촉사 매입 대책 절실”

#### 황영석 도의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황영석 의원(김제1·더불어민주당)이 19일 열린 제410회 정례회 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지부진한 김제 용지 현업촉사 매입사업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황영석 의원

전액 국비사업인 김제 용지 현업촉사 매입사업의 당초 목표는 53개 농가인데, 현재 14농가만 매입해 매입율은 26%에 불과하다.(6월 1일 기준) 정부는 새만금사업법에 따라 새만금 유역 수질개선과 혁신도시 약취개선을 위해 지난 21년 11월, 김제 용지 현업촉사 매입을 일대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 이를 근거로 지난 2022년 1월부터 현재까지 3년간 토지매입비 343억 원, 생태복원비 138억 원 총액 481억 원을 투입해 수질과 대기오염의 근원적인 원인으로 주목되고 있는 현업촉사를 매입하고 있다.

황영석 의원은 “전액 국비로 현업촉사를 매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인 김제 용지 특별관리지역 지정이 올해 말이면 해제돼 사업이 종료된다”며 “각 6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까지 30개월간 매입율이 26%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사업은 사실상 암울한 결말을 예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나해 도정질문 시 지사께서 어떻게 이뤄낸 사업임을 강조하면서, 도가 주도적으로 기간 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셨다”고 답했다. “하지만 지사께서 확고한 의지를 담아서 내놓았던 당시 답변을 하던대로 그칠 공산이 매우 크다”며 이에 대한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만호 기자

## “경찰청 항공대 부지 이전 갈등 해결 나서야”

#### 윤수봉 도의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윤수봉 의원(완주 1)이 19일 5분발언을 통해 전북경찰청 항공대 부지 이전 관련 갈등과 관련해 전북자치도가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1984년 출범한 전북경찰청 항공대는 출범당시부터 지금까지 완주군 상관면 신리에 있는 전북자치도 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 옆에 위치해 있다. 이로 인해 인근 마을 주민들은 지난 40년 동안 헬기 소음에 시달렸으며 항공대의 이전을 요구하고 있지만, 전북경찰청은 적합한 이전부지를 찾지 못하며 현 부지에 격납고 등을 재건축하겠다고 나서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상태.



윤수봉 의원

윤수봉 도의원은 “항공대를 중심으로 500미터 또는 1키로미터 내에 총 5개 마을이 위치해 있다. 세대수로는 총 1,175세대로, 이는 상관면 전체세대의 58%에 해당된다. 뿐만 아니라 이곳은 상관면 사무소가 위치한 면소재지이자 10개동

역으로의 이전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항공대입장에서 재건축 또는 이전이 시급하다. 격납고 건물은 지은지 40년이 지나 정밀안전진단 결과 최하위인 D등급을 받은 지 오래이며, 지난 21년 소형헬기에서 중형헬기로 교체하면서 격납고에 기체가 들어갈 수 없어 4년째 노상에 방치중이다. 윤 의원은 주민과 항공대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주체는 전북자치도부에 없다며 전북자치도가 나서서 하루속히 주민과 항공대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만호 기자